

An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elative Damage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irect Military Provocation

Ho Jung Kim⁺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Nation Defense Strategy, Hannam University,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handle the direct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t also compared the relative damage caused by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t is found that, dur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n offensive or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in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fields to prevent the crisis from spreading further.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fewer damages than North Korea when it used military offensive and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on from developing into an extreme crisis like war,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ursu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by applying various methods in military, politics, diplomacy, economy and other non-military fields.

Key words: crisis management strategy,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1. 서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김정은 체제는 현 상황을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위기를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 PHP연구소 모리(森本敏)는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혼란이 일어나도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그러한 혼란의 주요인은 북한의 상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Mori, 2000: 459-460)이라고 예견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대한 혁명 전략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독재체제를 유지해오고 있고 한국에 적대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에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평화적 기류가 한동안 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선노동당규약 서문과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Corresponding author: Ho Jung Kim, Tel. +82-42-629-7234, Fax. 82-42-624-9771, e-mail. ogoskim@hanmail.net

〈조선노동당규약 서문 일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²⁾

이렇듯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과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또한 유엔이 2015년 4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 2천462만 명 가운데 70% 정도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그나마 나아진 북한의 상황이 향후 10년 내에 과거 수준으로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Chosun.com, 2015.04.10). 이러한 것들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요인들로 잠복하고 있으며, 이는 내적 불안 요인 해결을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Kim, 2016: 179).

따라서 만약 북한의 대규모 군사적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경우 현재의 평화국면은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에서는 대북 군사적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망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주요 도발에 대해 한국정부에서는 Alexander L.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어떤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는가를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최근에 발생한 대청해전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직접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군사적 분야와 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어떤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군사적 위기관리전략 적용 결과에 따라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피해 규모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위 사례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기관리전략 적용이 상이하게 달라 이로 인하여 상대적 군사 분야 피해 규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최적의 위기관리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이론적 배경

1) 위기의 발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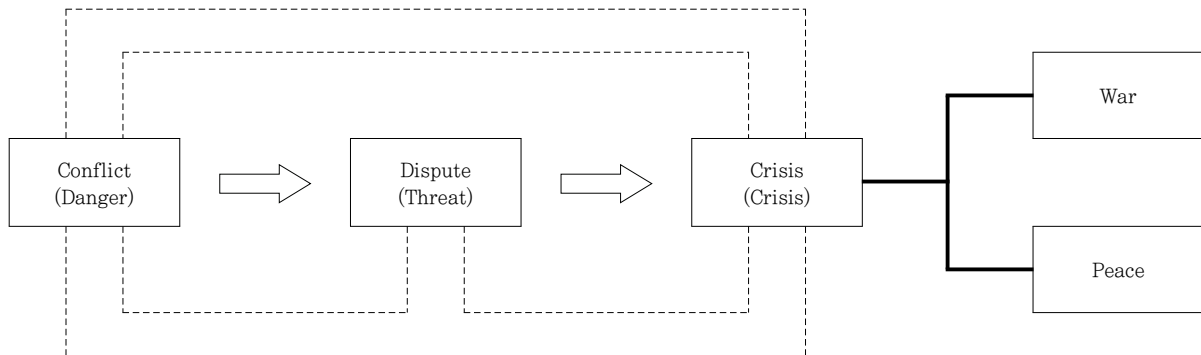
위기의 발생과정을 보면, 위기는 어떤 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갑자기 찾아온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갈등-분쟁-위기라는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된다. 이를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에는 갈등과 분쟁요인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갈등과 분쟁은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위기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위기가 확대되지 않고 초기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위기발생의 변화과정에서 위기상황 그 자체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기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기관리전략 적용은 군사적·비군사적 영역을 벗어나서 동일한 개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선노동당 규약서문.”

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조.



※ Source: Cho(2006: 27).

Figure 1. The generation process of crisis

2) 위기관리전략의 분류

위기관리전략에서는 군사적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외교, 경제적 분야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상대의 의지에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정치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즉 모든 수단의 정치, 외교, 경제적 이용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불리하고 자기 쪽에는 유리한 유형무형의 비대칭을 찾아내든가 또는 만들어 내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Cho, 2002: 108). 예를 들면, 쿠바 위기에서 피아의 지리적 위치의 비대칭을 이용한 재래병력의 시위적 전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Kahn은 힘의 우위확보는 현 단계에서 피아의 경쟁능력의 실질효과, 대결이 다른 단계로 이행했을 경우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피아의 추측 및 대결을 다른 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수단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힘의 우위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Kahn, 1965: 290).

다음은 위기관리전략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은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정책적 딜레마인 전쟁으로의 확대를 하지 않고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특질이 적절히 부합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즉 위기관리전략은 위기 발생단계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대비하였다가 최상의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관리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딜레마를 고려하면서 상황에 부합되게 군사·정치·외교

적 조치를 적절하게 배합 또는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Alexander L. George는 이러한 위기관리전략을 공세적 위기관리전략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으로 분류하였다(George, 1991: 377-392).

(1) 공세적 위기관리전략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은 위기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이 적용하기 용이한 전략으로써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도 현존하는 상황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위기를 유발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공갈(Blackmail)전략’이다. 이 전략은 상대로 하여금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통해 상대국으로 하여금 위기행위를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특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위기상황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지만 성공이 불확실하고 통제 가능한 위기 창출에 있어 위험이 따른다.

둘째, ‘제한적이고 전환 가능한 탐색(The Limited, Reversible Probe)전략’이다. 이 전략은 원하지 않는 위기상황에 대해 확대를 회피하는 방향 하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탐색행위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적이 현재의 위기상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반대하는지 불확실할 때 시도하는 전략으

로 적의 모호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통제된 압박전략(The Strategy of Controlled Pressure)’이다. 이 전략은 공격하는 국가 쪽에서 방어하는 국가가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어 국가의 노력을 잠식하여 현 상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넷째, ‘기정사실화 전략(The Fait Accompli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현 위기상황을 고수하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현 위기상황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위기고조의 위협성을 무시하고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위로 위기관리의 정책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상대국이 현상유지에 대한 결의가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도전국가가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일시에 달성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소모전략(The Attrition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기정사실화 전략을 시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위기상황이 기정사실화전략, 공갈전략, 제한적이고 전환 가능한 탐색전략 및 통제된 압박전략 등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이용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하기는 하나 약한 동기를 가진 상대에 대하여 사용하는 전략이다.

(2) 방어적 위기관리전략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도전하는 국가가 스스로 유리하도록 상황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하는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쟁을 피하고자 할 경우 방어적 위기관리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전략’이다. 이는 적이 이미 시행한 침략행위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위협이나 제한된 군사력을 구사하는 것으로 적이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상유지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어 전략이다(George, 1991: 5). 이는 본질적으로 무력사용의 위협이 뒷받침된 전통적 외교 전략인 군

사적 강압(적을 격퇴)과 구별되며, 적의 도발에 대해 무력의 사용보다는 설득으로 적의 행동을 중지시키면서 제한된 군사력의 무력시위 등을 통하여 적을 설득하여 행동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George, 1971: 23).

둘째, ‘대항적 확대억제를 동반한 제한적 확대전략(The Strategy of Limited Escalation Coupled with Deterrence of Counterescalation)’이다. 이 전략은 방어하는 국가가 위기상황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전하는 국가에 유리한 기본 규칙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시도으로써, 보다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제한적이며 선별적으로 확대를 시도하는 전략이다.

셋째, ‘적의 확대억제를 동반한 동일보복전략(The Tit-for-Tat Strategy Coupled with Deterrence of Escalation by the Opponent)’이다. 이는 위기에 대한 확대를 억제하면서 상대의 도발에 대한 동일 수준의 신중히 계산된 보복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넷째, ‘적의 확대억제를 동반한 능력시험전략(The Test of Capabilities Strategy Coupled with Deterrence of Escalation by the Opponent)’이다. 이는 방어하는 국가가 적의 저항도 수준의 통제된 도전에 직면하여 적이 신중하게 선택된 공개적 행위로 초래된 불리한 규칙과 제한요소의 틀 내에서 상대국가의 능력을 시험하는 전략이다. 즉 방어하는 국가가 제한적 확대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협하거나 정치적으로 제한이 될 때 주로 이 전략을 구사한다.

다섯째, ‘한계선 설정전략(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이다. 이는 적의 특정한 행동이 방어하는 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시하는 한계선을 설정하는 전략이다.

여섯째, ‘적의 오판을 피하기 위한 공약과 결의 전달 전략(Conveying Commitment and Resolve to Avoid Miscalculation by the Adversary)’이다. 이는 적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수세에 있는 국가가 도발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공약과 결의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일곱째, ‘협상타결을 타진하기 위한 시간별기전략(The Strategy of Buying Time to Explore a Negotiated Settlement)’이다. 이는 적의 도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거나 적이 완만한 속도로 위협해 올 때, 방어하는 국가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협상타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원치 않는 위기상황을 확대하지 않고 위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에서 언급한 공세적 위기관리전략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 중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위기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호보완적·복합적·단계적은 물론 이를 군사적·비군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이 3,094여회(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252)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국정부에서의 위기관리와 이때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다. 그나마 몇몇 학자에 의해서 발표된 포럼, 학술지, 그리고 논문 등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ho(1996)는 ‘한반도 위기관리 사례연구’에서 1968년도에 발생한 청와대 기습사건을 한국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과 대표적 위기관리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향후 한국 위기관리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불리는 1·21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서울 시내 청운동·홍제동 등에 31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민간인을 사살하고 버스를 폭파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즉각적으로 동원된 군경합동 수색대에 의하여 1명은 생포되고 27명은 사살되었으며 나머지 3

명은 도주한 사건이었다. 이 작전에서 한국의 피해는 전사 36명, 부상 68명, 총 104명이었다. 비록 북한의 기도는 실패에 그쳤지만, 기습목표가 청와대였다는 점, 침투경로가 바로 수도권 북방이었다는 점, 그리고 침투과정에서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주어진 충격은 컸으며, 또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고 한국정부는 위기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정부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진행하면서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게 항의를 실시하고, 육·해·공·해병대에 비상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전국 비상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대통령 주재 하에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미군의 군정위원회 행동에 따른 협조 문제, 대북한 응징 조치, 방공체제 정비문제, 그리고 후방의 전투력 보강을 위한 예비군 소집태세 및 훈련 강화책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2월 1일 소집된 국회는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태세 확립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공격을 지지하였다. 비록 여기에서 한국은 미국의 반대로 실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응징하고자 하는 ‘응징보복’ 전략을 추구하였다고 분석하였다(Cho, 1996: 211-231).

Yoon(2000)은 ‘연평해전과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에서 제1연평해전 사건의 배경과 한국에서의 위기의 전개 및 위기관리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위기확대를 막기 위한 외교적 조치와 침해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한국의 위기관리 형태를 분석하고 위기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1연평해전 시 한국의 대북 위기관리의 딜레마는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과 교전으로 야기된 국가이익의 침해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동시에 위기확대로 인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간의 상충된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Alexander L.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강압외교전략’을 적용하여 북한 경비정의 침범과 선제공격에 대해 대규모 전투보다는 저강도 군사대응을 추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응하는 신중히 계산된 ‘동일보복전략’을 구사하여 위기 확대를 방지하고 전쟁억제 및 북방한계선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분석하였다(Yoon, 2000: 114-141).

또한, Yoon(2012)은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에서 한반도는 북한의 복합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과 위기관리전략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사례로 들어 Alexander L.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강압외교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위기관리를 위해 강압외교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활이 걸린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국익에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제한된 군사력 위협시위와 다른 제재 등을 통한 위기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Yoon, 2012: 2-15).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통적 안보위협과 관련된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직접적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를 연계한 위기관리전략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였던 수많은 위

기사건 중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적 위기 수준인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위기관리전략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위기상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군사적·비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다.

가설2) 한국정부가 적용한 군사적 위기관리전략에 따라 북한의 피해규모에 영향이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국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에서는 위기관리를 위하여 어떤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적용한 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간 피해의 차이가 있었음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분석의 틀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춰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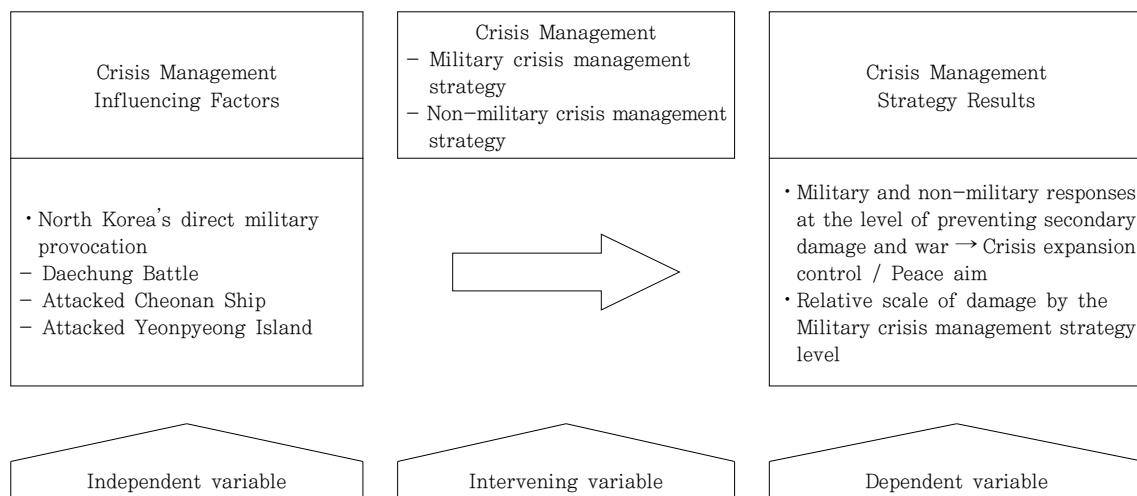


Figure 2. Analysis framework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과거부터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므로 한국정부에 위기상황으로 영향을 주는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위기상황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조기에 평화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발생한 어떠한 위기상황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2차 피해 및 확산방지 수준에서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으로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한 결과와 군사적 위기관리전략 적용결과에 따라 상대적 피해규모가 어떠한지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귀결하였다.

III.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전략 분석

1. 대청해전시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1) 대청해전 개요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경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남하하자 한국 해군 고속정은 5차례 경고방송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대청도 동쪽 11.3 km 지점까지 남하하였고, 해군 고속정은 경고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북한 해군의 경비정이 조준사격하면서 교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제2연평해전 이후 7년 5개월여 만에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또 다른 해전이였다. 이는 11월 17일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대청해전이라고 명명하였다(DongA.com, 2009.11.17).

교전 결과 한국 고속정은 외벽에 15발의 포탄 흔적이 있었고 사상자는 없었다. 북한 중앙 TV는 이번 해전에서 북한 경비정은 8명이 사망하였지만 승리했다고 발표하였다(Ministry of Unification, 2009: 26). 그렇지만 북한 경비정 1척이 반파되어 불능상태가 된 완전한 한

국 해군의 승리였다.

2)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대청해전이 발발하자 정부는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으로 즉각적인 관계자 회의를 즉각 가동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안보태세와 사태악화 방지를 강조하는 등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사태의 원인이 북한 측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함과 동시에 아측의 고속정에 대한 선제 조준사격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정부는 대청해전 시 군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북한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포격을 가하였다. 이는 Alexander L.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인 ‘대항적 확대억제를 동반한 제한적 확대전략(The Strategy of Limited Escalation Coupled with Deterrence of Counterescalation)’을 적용하여 위기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전환하고자 강력하게 응징하였다. 또한, NLL을 침범 시 강하게 응징한다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인 ‘한계선 설정전략(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을 적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경비정이 1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더 이상 위기상황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인 ‘기정 사실화전략(The Fact Accompli Strategy)’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피해는 고속정 선체에 15발의 함포 흔적만 남았지만, 이에 비해 북한은 8명이 사망하고 경비정 1척이 반파되었다. 즉 다양한 한국정부의 공세적·방어적 위기관리 전략 혼용 적용으로 북한의 피해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비군사적으로는 북한경비정의 NLL침범과 선제적 공격으로 원하지 않는 대청해전 발생에 대하여 더 이상 위기상황을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비군사적 방법으로는 원인제공을 한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북한과의 교류 중단 등 특별한 제재는 하지 않고 이후 북한의 군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취함으로써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인 ‘제한적이고 전

환 가능한 탐색(The Limited, Reversible Probe)' 전략을 구사하였다.

2. 천안함 피격 도발 시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1) 천안함 피격 개요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 해상에서 해군 함정 천안함(PCC-772)은 정상적인 해상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2010년 3월 26일 21:22경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피격되었다. 사건 초기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사건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어뢰로 인해 침몰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승조원 104명 가운데 58명은 구조되고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되었다.

2)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하고, 외교안보수석은 21:51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3월 26일 23:30경 대통령 주재 제1차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사건에 대한 발생원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인원구조 현황, 실종자 구조를 위한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사건 초기 청와대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4차례나 열고 비상근무체제를 3일째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이후 정부는 사건 원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 공조를 얻어 과학적 증거로 진실을 규명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한국측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라고 결론지었다(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0: 293-295).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문(Chosun.com, 2010.05.25)에서 남북교류 협력 중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중단,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국민의 방북 불허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G8 정상회담 등 3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외교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회부하였다.

한국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로 군사적으로는 최초 원인규명 지연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는 하지 못하였지만 원인 등을 찾기 위해서 '시간별기전략(The Strategy of Buying Time)'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하지 않았다. 또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이후, 위기 국면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5·24 조치사항으로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제재를 위한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위기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강압외교전략(Coercive Diplomacy)'을 적용하였다. 비군사적으로는 북한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5·24 조치를 공포하는 '공갈(Blackmail)'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으로 '통제된 압박전략(The Strategy of Controlled Pressure)'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규명하고 독자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통해 한반도 위기 재발을 막고자 한국정부의 의지를 북한에게 전달하여 현 위기상황을 변경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추가도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3.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1) 연평도 포격 도발 개요

2010년 11월 23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에 해병연평부대는 전구급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우리 해역 훈련구역에서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경,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Yonhapnews, 2010.12.17).

그러나 연평부대는 계획대로 한측 해역에 3,657발의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 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북한은 개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진지에 있는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였다(YTN, 2010.11.23). 이에 우리 군은 첫 피격 받은 지 13분 후, 북한군 무도 포진지 및 개머리 포진지에 K-9 자주포 80여발을 발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연평도에 거주하는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사망 및 전사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고, 주민 1,700여명이 대피소로 나누어 피신하였다. 북한측의 피해는 40여명이 사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Wikipedia, 2012.03.02).

2) 정부의 대응 및 위기관리전략

북한의 소행이 명확한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해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등 응징정보복을 하였으며, 비록 현장투입은 하지 않았지만 공군전투기도 출격시켰다. 이는 동일한 수준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에 대해 응징정보복을 가하면서도 위기확대 및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이후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태 때와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는 별다른 제재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단독으로 5·24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선에서 후속대응을 하였다. 강화된 조치 사항으로는 남북 적십자 회담 연기,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방북 불허 등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으로는 K-9 자주포를 이용하여 북한의 도발 원점인 무도와 개머리 포진지에 80여발을 포격함으로써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인 ‘동일보복전략(Tit-for-Tat Strategy)’을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이후 서해 5도 도서를 단순히 수도권을 방어하는 교두보 수준이 아닌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써 자주포, 다련장 등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2011년 6월 15일에는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강압외교전략(Coercive Diplomacy)’을 추구하였다. 한국의 피해는 해병대원 및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고, 민간인 6명과 해병대원 16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다. 북한도 한국의 자주포에 의한 응징정보복으로 40여명 사상자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위기관리전략 적용으로 인하여 양측의 피해는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군사적으로는 북한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5·24 조치를 공표하는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인 ‘공갈(Blackmail)’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5·24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남북 적십자 회담 연기, 개성공단 기업관계자 방북 불허 등을 시행하는 공세적 위기관리 대응 전략으로 ‘통제된 압박 전략(The Strategy of Controlled Pressure)’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위기를 도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IV. 가설 검증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대청해전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해 정부는 Alexander L. George의 위기관리전략 중 군사적과 외교·경제적 등 비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는지와 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시 상대적 피해규모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이를 가설과 연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주장한 가설1)은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다’이며 가설 2)는 ‘한국정부가 적용한 군사적 위기관리전략에 따라 북한의 피해규모에 영향이 있다’이다.

이들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는 대청해전 시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해군의 경고통신에도 불응하고 선제 조준사격을 가해오자,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포격을 가함으로써 ‘제한적 확대전략’을 적용하여 위기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전환하고자 강력하게 응징하였다. 또한, NLL 침범시 응징한다는 ‘한계선 설정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경비정이 1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더 이상 위기상황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정사실화전략’을 추구하는 등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응징을 하였다. 또한, 비군사적으로는 북한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이후 북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정도의 ‘제한적이고 전환 가능한 탐색전략’을 적용하였다.

천안함 피격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위기관리로 군사적으로는 최초 원인규명 지연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는 하지 못하였지만 원인 등을 찾기 위해서 ‘시간별기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확대

Table 1.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elative damage scale about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Category		Military	Non-Military		
			Blame and Appeal Requirement	Exchange Interruption	Sanctions
Daechung Battle	Method	○ (Onsite response)	○	×	×
	Crisis Management Strategy	The Strategy of Limited Escalation Coupled (D) 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 (D) The Accomplished Fact Strategy (O)	The Strategy of the Limited, Reversible Probe (O)		
	Relative Damage Scale	• Korea: * • North Korea: ***	-		
Attacked Cheonan Ship	Method	×	○	○	○
	Crisis Management Strategy	The Strategy of Buying Time (D) The Strategy of Coercive Diplomacy (D)	The Strategy of Blackmail (O) The Strategy of Controlled Pressure (O)		
	Relative Damage Scale	• Korea: *** • North Korea: -	-		
Attacked Yeonpyeong Island	Method	○ (Onsite response)	○	○	○
	Crisis Management Strategy	Tit-for-Tat Strategy (D) The Strategy of Coercive Diplomacy (D)	The Strategy of Blackmail (O) The Strategy of Controlled Pressure (O)		
	Relative Damage Scale	• Korea: *** • North Korea: ***	-		

*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O),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D)

* Dead/Sank: ***, Wounded/Destroyed: **, Slight Damage: *

하지 않았다. 또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이후, 위기 국면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5·24 조치사항으로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 대북 심리전 제재를 위한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하여 위기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강압외교전략’을 적용하였다. 비군사적으로는 북한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5·24 조치를 발표하는 ‘공갈전략’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실행으로 ‘통제된 압박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규명하고 독자적 또는 외교적 제재를 통해 한반도 위기 재발을 막고자 한국정부의 의지를 북한에게 전달하여 현 위기상황을 변경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추가도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연평도 부대의 K-9 자주포를 이용한 즉각 대응사격으로서 ‘동일보복전략’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자주포 추가 배치 등을 통한 ‘강압외교전략’을 적용하였고, 비군사적으로는 사건직후 개성 공단 기업관계자 방북 불허 등 5·24 조치 강화를 통한 국내 및 외교적 제재조치를 강행하는 ‘공갈전략’과 ‘통제된 압박전략’을 적용하였다. 즉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의 혼용 적용하여 위기관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가설1)에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다’가 검증되었다.

한편, 가설2)의 ‘한국정부가 적용한 군사적 위기관리 전략에 따라 북한의 피해규모에 영향이 있다’는 한국정부에서 군사적 측면에 적용한 위기관리전략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위기관리전략 적용결과에 따라 상대적 피해규모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한국정부는 대청해전 시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인 ‘제한적 확대전략’과 ‘한계선 설정전략’을 적용하다가,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인 ‘기정사실화전략’을 적용함으

로써 양측 간 피해규모는 크게 낮았다. 즉, 한국의 피해는 경미(*) 수준이었지만, 북한의 피해는 사망/침몰(***) 수준으로 매우 컸다. 천안함 피격 도발 시에는 군사적으로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인 시간별기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피해규모는 사망/침몰(***) 수준이었고 북한군의 피해는 없었다. 이는 한국정부의 방어적 위기관리전략 적용으로 한국의 피해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 중 ‘동일보복전략’과 ‘강압외교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피해규모는 사망/침몰(***) 수준이었고, 북한의 피해도 사망/침몰(***)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 시 한국정부의 군사적 위기관리전략 적용 결과에 따라 상대적 피해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이후 북한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도발은 지금까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위기관리 전략 적용에 있어서 방법과 강도의 차이로 상대적 피해 규모에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서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위기관리전략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그 고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국의 안전과 번영에 적지 않은 안보 위협요인은 계속 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해 한국정부에서는 어떠한 군사적·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으며, 군사적 위기관리전략 적용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정부는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군사적 및 비군사적으로 공세적 및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위기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

였는데 군사적으로는 공세적 및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고, 비군사적으로는 공세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였다. 또한, 군사적 위기관리에 있어서 공세적 및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한국군보다 북한군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기관리는 위기가 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과 적의 적절한 위기관리전략 적용으로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접적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최적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관리를 하여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김정은 체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조성을 지속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예측 불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그릇된 학습효과를 철저히 차단하고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일삼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평소부터 위기관리에 대해 정책발전 등을 꾸준히 강구해야겠다.

또한, 한국정부는 강한 군사적·비군사적 능력을 유지하여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게 한국이 수호해야 할 국익을 명확히 전달하고, 군사도발로 인한 위기상황 조성이 그들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기 확대 시 감수해야 할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여 발전시켜야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김호중의 “한국 보수·진보 정부에서의 대북 위기관리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2)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References

- Alexander, L. George. 1971.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Laos, Cuba, Vietnam*. Boston: Little, Brown Company. 23.
- Alexander, L. George. 1991.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5.
- Alexander, L. George. 1991.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377-392.
- Cho, Young Gab. 1996. *Crisis Management Case Stud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Military*. 3: 211-231.
- Cho, Young Gab. 2002. *Korea Crisis Management Theory*. Palbokone Publishing Co.
- Cho, Young Gab. 2006.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ory*. Sunhak Publishing Inc.
- Chosun.com. 2010.5.25. 7 Major Sanctions Announced to North Korea. Preemptive Self-defense When Invasion of Territorial Waters, Airspace, Territory.
- Chosun.com. 2015.4.10. International Support Continues to Shrink, 70% of Nor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Financial Sanctions Impact.
- DongA.com. 2009.11.17. Military, ‘Third West Sea Engagement’ → ‘Daechung Battle’ Named.
- DongA.com. 2012.3.2. More than 40 North Korean Soldiers Were Bombarded in Yeonpyeong Island.
- Herman, Kahn. 1965.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290-291.
- Kim, Ho Jung. 2016. A New Understanding of Korea’s Military Security Crisis and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Battles of Yeonpyeong. *Military Issue*. 85: 179.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0.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Joint Investigation of the Cheonan Ship Incident*. 293-295.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6. *2016 Defense White Paper*. 252.
- Ministry of Unification. 2009.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6.
- Ministry of Unification. NKInforma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alist Constitution, Article 9.
- Ministry of Unification. NKInformation. Workers’ Party of Korea,

Rule Foreword.

Mori. 2000. Security Theory: Crisis Management in the 21st Century World. *PHP Institute*. 459-460.

Wikipedia. Damag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onhapnews. 2010.12.17. North Korea, Second and Third Strike at Yeonpyeong Shooting Training.

Yoon, Tae Young. 2000. Battle of Yeonpyeong and Korea's Crisis Management toward North Korea. *Marine Strategy*. 109: 114-141.

Yoon, Tae Young. 2012. Korea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Jpi Policy Forum*. Jeju Peace Institute. 2-15.

YTN. 2010.11.23. Marine Corps 1 Death • 13 Injured... All Military Alert...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YTN. 2010년 11월 23일자. 해병대 1명 사망 • 13명 부상...전군 경계태세...,

국방부. 2010.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 293-295.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김호중. 2016. 제1 • 2연평해전을 통한 한국의 군사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재인식. *군사논단*. 85: 179.

동아.com. 2009년 11월 17일자. 軍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명명.

동아.com. 2012년 3월 2일자. 연평도 대응포격에 북한군 40여명 사상...남 침단무기에 겁먹고 맞서기 꺼려.

모리. 2000. 안전보장론: 21세기 세계의 위기관리. *PHP연구소*. 459-460.

연합뉴스. 2010년 12월 17일자.北,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시 2차, 3차 타격.

위키백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피해규모.

윤태영. 2000. 연평해전과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 *해군대학 해양전략*. 109: 114-141.

윤태영. 2012.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발전방향.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2-15.

조선.com. 2010년 5월 25일자. [대북 7대조치 발표]영해 • 영공 • 영토 침범 뎀 선제적 자위권 발동.

조선.com. 2015년 4월 10일자. 국제사회 지원은 계속 줄어, 북한 인구 70%가 식량난...금융 제재조치 영향.

조영갑 1996. 한반도 위기관리 사례연구. *한국군사*. 3: 211-231.

조영갑. 2002. *한국위기관리론*. 서울: 팔복원.

조영갑. 2006. *국가위기관리론*. 서울: 선학사.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선노동당 규약서문.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9조.

통일부. 2009. 월간 북한 동향. 26.

Received: Sep. 27, 2017 / Revised: Nov. 24, 2017 / Accepted: Nov. 27, 2017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기관리전략 적용과 상대적 피해규모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 적용하였을 시 이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규모가 큰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략적 대응력과 전술적 기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현장에서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 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피해규모가 북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위기관리전략, 공세적 위기관리전략, 방어적 위기관리전략

Profiles **Ho Jung Kim** : He received his Ph.D. from Hannam University, Korea in 2017. He is an instructor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Nation Defense Strategy at Hannam University.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ogoskim@hanmail.net).